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내 발의 시동… 노동특례 ‘최대 변수’

특구에 7개 분야 패키지 지원 법안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등 논의 전망 사회적 대화 전후 발의 여부 미결정

정부·여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별법에 담긴 ‘노동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후 특별법 발의 시점과 연내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가운데 노동특례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화이트칼라 이그젼션(관리직과 연구·개발직 대상 노동시간 규제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제조업 파견 확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국들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앞세워 자국 기업의 경쟁

경영계 주장	주요 쟁점	노동계 주장
해외 경쟁국은 근로시간, 고용형태 규제 유연화로 기업 인력운용 자유도 폭넓게 보장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관리직과 연구·개발직 대상 노동시간 규제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실질적인 무제한 노동 가능성 노동자 건강권 침해
현행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대응 힘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정산기간 대폭 확대 특정기간 집중 장시간 노동 허용	주52시간 제도 취지 훼손 노동자 건강권 훼손 우려
프로젝트 전체 주기에 맞춰 숙련된 인력 안정적 운용 환경 조성 필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	비정규직 장기화 및 고용불안 심화
산업 경쟁력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	제조업 파견 확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 허용 검토	생산직의 구조적 비정규직화 우려

자료/ 경총·한국노총자료 취합

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미국·일본 등 처럼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규제를 유연화해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메가특구법 관련 제안을 발표하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인 만큼, 노동법

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며 산업 경쟁력을 다져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세기 전 제조업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제에 여전히 묶여 있다”며 “현재의 경직된 노동법제로는 프로젝트에 수년이 걸리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집중 몰입이 필요한 R&D(연구·개발) 조직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인재

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젼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경우 메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사자 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고용불안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조업 파견 확대는 생산직의 구조적 비정규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메가특구법 내 주4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대화 제안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 전제조건으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요구했다며 이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

에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주장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우회로를 만든다는 시민사회와 당 내부 비판에 직면해 이를 제외하고 입법한 바 있다.

당정이 당정협의회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노사 간 사회적 대화 여부에 따라 특별법 발의 시점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가 ‘9월 발의·연내 입법’이라는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메가특구법을 이번달 내에 발의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노동 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지는 이후 논의 사항이라서 대화 이후에 (법안 발의를) 할 것인지, 중간에라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강신철 청문회… 통합엔 의지, 재산 의혹엔 사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與, 국방개혁·정책 역량 집중 검증 野, 위장전입·재산 신고 누락 추궁

여야가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한 가운데, 여당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지를 점검한 반면, 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강신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다”며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미래 전장에서 육해·공군의 영역이 중첩되는 만큼 통합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의지가 약간 애매하다”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육사 출신 선후배 등의 반대를 거론하며 이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강 후보자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

다”면서도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통합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나, 질문에는 “기본안에 대해서 들어 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안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의견을 듣고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50만 장병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장관 본인부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별공급 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문제 삼으며 주소 이전 이유를 거듭 추궁했다. 그는 “강신철 거민(강신철+철거민)”이라고 들어봤는가. 특별분양은 (자기 집이 철거됐을 때)

거주지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다. 후보자는 강원도에 이미 주민등록지가 있다”며 “주민등록을 왜 옮겼냐고 물었는데 (서초구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주민등록을 옮긴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소지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사과했다”고 답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과 재산 신고 누락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된 장남이 친척에게 거액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는데도 후보자 부부가 몰랐다는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서른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고 답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보세력 연대시 경쟁력 단일화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6일 진보 세력 연대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의석수 20석인 정당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진보세력 연대 방안 중 하나로 소개하며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



구해 온 것이다. 현재 20명인데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세력 연대 상대인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정수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의사일정 협의와

국회 조직 구성 참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받는 혜택을 받는다.

김 대표는 연대방안 중 하나로 소개한 합리적 선거제 개편을 두곤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된다”며 “결선 투표제도 대선은 기본이고 광역 단체장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 우선 대선까지 포함하고, ‘이긴 단일화’하고 ‘상생 단일화’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문제를 선거 때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해

거론했던 ‘경쟁력 단일화’ 주장도 고수했다. 그는 “합당하면 한 당 안에서 공천할 때 경선하는데, 다른 당끼리 단일화를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우리가 1등이면 그 (1등한) 사람에게 (후보 자격을) 주면 되고, 우리가 2·3등이면 2등한테 물아줘서 1등 하게 만드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야 ‘채택 기싸움’

민주, 한동훈 수사자료 입수 경위 공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전날(15일)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증 끝에 끝내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고, 추후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찰 내부 수사 자료와 당사자 간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의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16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묻는 질문에 “흔들림이 없었다. 청문회 전에 제가 모르는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어서 본편은 조금 미묘했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보이는 기소 계획서와 문자 메시지, 음성 녹취 같은 검찰 캐비닛 정보 공개 경위에 대해 법무부에 수사와 조사를 강력 요구했다”며 “정치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흉한 수사 정보 흘리기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청문회는 끝났다. 이제 한동훈 의원의 차례”라며 “남에겐 해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왜 밝히지 않는지를 다시 물었다. 청문회가 끝난 이제는 그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를 답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